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010-4185-2228 minsnaion@gmail.com)
 발 신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010-6311-3334 tongil615@naver.com)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2059-1886 min@pspd.org)
 제 목 [논평]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날 짜 2015. 12. 29. (총 4 쪽)

논 평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 종료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보호법안 처리 없이 민생을 논하지 말라
 전월세 대란 방기한 여야,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

1.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2015년 1월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지리멸렬했던 지난 1년간의 활동에 이어, 12월29일 열린 마지막 회의마저 아무런 소득 없이 마치고 말았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킬 따름이었다.
2. 서민주거복지특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에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12차례의 회의 중 절반 이상을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하나같이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반대하자, 특위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약속된 6개월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서만 부랴부랴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9월 재개된 특위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측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조차도 전월세 대책에 반대하는 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편향적인 의도를 드러냈다.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 결과와도 배치되는 모순적인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대료 규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이전에는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해 반대하던니,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위원 출석표

위원명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김성태	강석훈	김도읍	김희국	나성린	박덕홍	박민식	이노근	하태경	이미경	윤호중	김경협	김상희	김현미	이언주	전해철	홍종학	서기호	
1차	○	×	○	×	×	×	○	○	○	○	○	○	○	○	×	○	×	×	×
2차	○	×	○	○	×	○	×	○	×	○	○	×	○	○	○	×	○	○	○
3차	○	○	×	○	○	×	○	○	○	○	○	○	○	×	○	○	○	○	×
4차	○	×	×	○	×	○	×	×	○	○	○	○	○	×	○	○	○	○	○
5차	○	○	○	○	×	○	×	○	×	○	○	○	○	×	×	○	○	○	○
6차	○	×	×	×	×	×	×	×	×	○	○	○	○	×	×	×	×	○	○
7차	○	×	×	○	×	×	×	○	○	○	○	×	○	○	○	○	○	○	○
8차	○	×	○	×	×	×	×	○	×	○	○	○	○	○	○	○	○	○	○
9차	○	×	×	×	×	○	×	○	×	○	○	○	○	○	×	×	○	○	○
10차	○	×	×	×	×	○	×	○	×	○	○	○	○	○	○	×	○	○	○
11차	○	×	×	×	○	×	×	○	×	○	○	○	○	○	○	○	×	○	○
12차	○	×	×	×	×	×	×	○	×	○	○	○	○	○	○	○	○	○	×
합계	12	2	4	5	2	5	2	10	4	12	12	10	12	8	8	7	9	9	

3. 전국의 주거·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내세운 바 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②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③ 표준임대료 제도 ④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거감독관 설치 ⑤ 공공임대주택 확충 ⑥ 청년, 노동자,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대책 마련 ⑦ 세입자(임차인)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및 고충 처리 대책 마련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색한 반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상반기에는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주거기본법이 통과됐으나, 주거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이 빠져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월차임 전환을 인하,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겨우 합의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 결국 1년 내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세입자 보호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론으로, 올해 민생법안 1호로 내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결코 책임을 면할 순 없다.

4. 세계적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시행 중인만큼,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와 독일, 프랑스 등의 서구 유럽에서는 1960년대 이래 보편적으로 정착된 주거안정 정책으로, 그 핵심은 계약갱신 보장을 통한 장기 임대차에 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이끌어 왔다. 이제 19대 국회는 임시국회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치솟는 주거비 폭등으로 한파에 집 밖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장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특위는 이대로 종료되지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세입자 보호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국회와 정부를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반대하고 이에 실패한 이들을 기억해, 반드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임대료 규제 효과에 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이슈리포트